



MVPR-2008-11

VIP REPORT

2008. 3. 25.

■ **신정부 선거공약에 대한 국민 수용도 조사**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박 태 일
편집위원 : 이부형, 허만율, 홍순직, 주원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030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컨설팅본부(02-3669-411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신정부 선거공약에 대한 국민 수용도 조사

Executive Summary	i
1. 조사 개요	1
2. 조사 분석 결과	3
문1) ‘연 7% 성장’ 공약에 대한 수용도	3
문2) ‘국민소득 10년내 4만 달러’ 공약에 대한 수용도	5
문3) ‘10년내 세계 7대 강국’ 공약에 대한 수용도	7
문4) ‘일자리 창출 연 60만 개’ 공약에 대한 수용도	9
문5)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에 대한 수용도	11
문6) ‘한미FTA 추진’ 공약에 대한 수용도	13
문7) ‘작은 정부’ 공약에 대한 수용도	15
문8) 선거 공약 준수에 대한 의견	17
3. 종합 평가	18
■ HRI 경제 지표	19

1. 조사 개요

- 신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대선공약에 대한 국민수용도를 설문 조사
 - 국민수용도라 함은 신정부가 선거공약에서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치에 대해 '이 정도면 된다' 하는 마음 속 기대치를 가리킴
 - 2008년 3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동일한 설문문항으로 해서 일반국민(600명, 전화조사)과 전문가(250명, Fax조사)로 나눠 조사함

2. 조사 결과

문1) '연 7% 성장' 공약에 대한 수용도

- 7% 경제성장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국민은 11.8%, 전문가는 6.5%에 불과하였고,
-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5% 수준'의 성장을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 (일반국민 36.5%, 전문가 35.2%)
- 국민들은 공약준수보다 현실을 감안한 경제운용을 바라고 있음

문2) '국민소득 10년내 4만 달러' 공약에 대한 수용도

- '4만 달러 이상'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국민 13.4%, 전문가 11.9%에 불과
-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3만~3만5천 달러 미만'을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일반국민 32.6%, 전문가 51.4%)

문3) '10년내 세계 7대 강국' 공약에 대한 수용도

- '7대 강국'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11%에 불과
- 가장 많은 의견은 '10위~12위 정도'로 만족 (일반국민 41.1%, 전문가 44.0%)
- 현재의 13위를 유지해도 수용한다는 입장에도 일반국민 14.9%, 전문가 11.0%로 나타나, 절반 정도의 국민들은 현재보다 약간 상승한 정도의 성과를 수용하고 있음

문4) '일자리 창출 연 60만 개' 공약에 대한 수용도

- '60만 개'를 반드시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국민 19.4%, 전문가 10.1%임
- 전문가는 '40만 개'를 가장 많이 수용(43.1%)하였고, 일반국민은 '50만 개'(28.5%), '40만 개'(27.3%), '30만 개'(24.8%) 등을 고르게 수용
- 이런 결과는 다른 공약보다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음을 나타낸 것으로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이 노력해야 하며, 한편으로 국민에 대한 정책이해를 넓혀야 할 것임

문5)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에 대한 수용도

- 대운하 건설을 '선거공약이니까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공약 준수에 대해 일반국민은 10.1%, 전문가는 1.8% 응답에 불과
-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사업성 분석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임 (일반국민 55.9%, 전문가 50.5%)
-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일반국민 28.2%, 전문가 47.7%가 제시
-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부가 대운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국민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임

문6) '한미FTA 추진' 공약에 대한 수용도

- 일반국민은 49.9%, 전문가는 74.1%가 한미FTA가 '올해 안에 국회비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일반국민 9.3%, 전문가 1.9%에 불과
- '천천히 추진해도 된다'에 일반국민 35.2%, 전문가 24.1%의 비교적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어, 정부는 국민에 대한 FTA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면서 한미FTA의 조속한 타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문7) '작은 정부' 공약에 대한 수용도

- 신정부 출범과 맞물려 단행된 정부 축소 조치에 대해 일반국민은 '지금 정도의 축소로 만족한다'(46.5%)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더 줄여야 한다'에도 40.9%로 높은 응답을 보였음
- 전문가는 '더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59.3%)이 가장 많음
- 국민들은 지금 정도의 축소에 만족하면서도 한편으로 아직 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문8) 선거 공약 준수에 대한 의견

- 종합적으로 선거공약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가를 설문한 결과 '선거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일반국민 26.7%, 전문가 9.4%가 응답하였고,
- 일반국민은 73.3%, 전문가는 90.6%라는 절대 다수가 '선거 공약은 현실적 여건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임

3. 종합 평가

-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선거 공약에서 제시한 목표치를 엄격하게 요구하거나 기대하고 있지 않음
- 정부는 선거공약에 제시한 목표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현 상황에 맞춰 정책 목표를 재설정, 운용하는 게 바람직함
 - 목표수치에 얽매이게 되면 정책 운용에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있음
 - '숫자 놀음'(numbers game)이라는 함정에 빠져, 실효성이 높은 정책 추진을 통한 달성보다는 단순한 수치 관리에 집착할 위험이 높아짐
 - 만약 목표 미달성시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됨
- 다만, 정부는 목표 변경 및 추진 정책에 대하여 국민과의 충분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신정부 선거공약에 대한 국민 수용도 조사

1. 조사 개요

- (개요) 신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신정부 대선공약에 대한 국민 수용도를 설문 조사
 - 국민 수용도라 함은 신정부가 선거공약에서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치에 대해 '이 정도면 된다' 하는 마음 속 기대치를 가리킴
 - 설문 항목은 신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대한민국 747'과 일자리 창출, 대운하 건설, 한미FTA 추진, 작은 정부 실천 등으로 구성
 - 2007년 3월 5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일반국민과 전문가로 동일한 설문 실시

- (일반 국민) 전국 20대 이상의 일반국민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576명이 응답
 - 통계청 지역 인구 비례에 따라 지역별 표본 추출
 - 전화 응답 조사 방법으로 실시
 - 샘플링에 대한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오차의 범위는 $\pm 4.08\%$

- (전문가) 전문가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109명이 응답
 - 전문가는 기업인, 교수, 연구원, 기타 (언론인, 법조인) 등을 대상
 - 기업인은 100대 기업 기획실장중 50명, 연구원은 국책 및 민간 경제기관의 연구원 70명, 교수는 서울 소재 대학의 경제·경영·정치·행정·외교·사회 전공 교수 100명, 그리고 기타 30명으로 표본 구성
 - Fax 조사 방법으로 실시

< 일반국민 응답자 특성 >

(단위 명 %)

구분		사례	%	구분		사례	%
지역	서울	115	20.0	월소득	100만원이하	49	8.6
	강원	18	3.1		101-200만원	146	25.7
	인천/경기	154	26.7		201-300만원	166	29.2
	충청	65	11.3		301-400만원	117	20.6
	전라	67	11.6		401-500만원	54	9.5
	대구/경북	62	10.8		501-600만원	19	3.3
	부산/울산/경남	95	16.5		600만원이상	18	3.2
연령	20대	97	16.8	직업	회사원	163	28.3
	30대	127	22		공무원	39	6.8
	40대	139	24.1		자영상공업	139	24.1
	50대	119	20.7		전업주부	146	25.3
	60대 이상	94	16.3		기타	89	15.5
성별	남성	289	50.8	학력	고졸이하	220	38.7
	여성	280	49.2		대졸	315	55.5
					대학원이상	33	5.8

< 전문가 응답자 특성 >

(단위 명 %)

구분		사례	%	구분		사례	%
연령	30대	18	16.5	직업	기업인	12	11.0
	40대	55	50.5		교수	38	34.9
	50대 이상	36	33.0		연구원	47	43.1
기타					12	11.0	

2. 조사 분석 결과

문1) '대한민국 747'의 '연 7% 성장' 공약에 대한 수용도

<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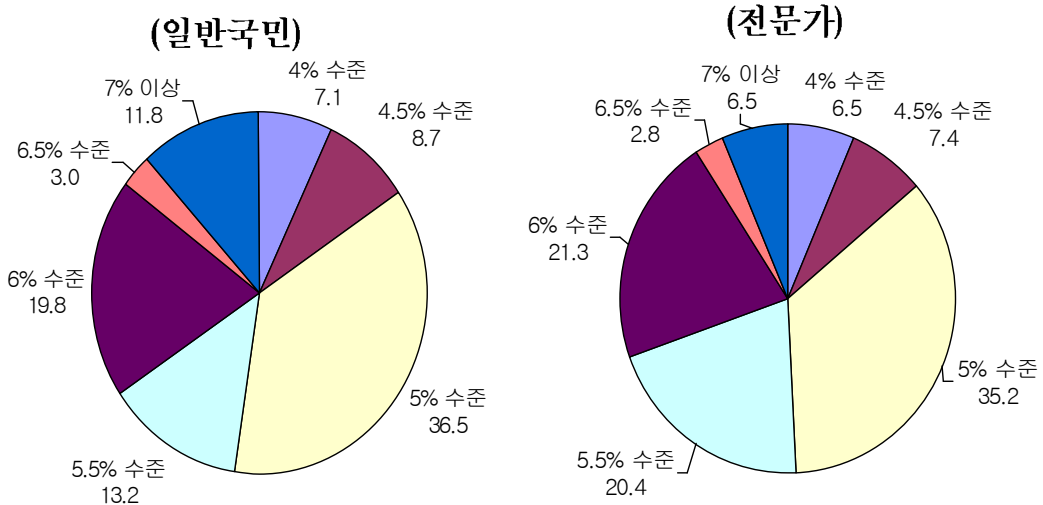
- 공약목표인 '7%'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일반국민은 11.8%, 전문가는 6.5%에 불과하였으며,
-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5% 수준'의 성장을 수용하고 있음 (일반국민 36.5%, 전문가 35.2%)
- 5%대(5% 응답자 + 5.5% 응답자)가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고, 6% 이상의 응답도 30%를 넘어 최소한 5% 이상의 성장을 희망하고 있음
- 그러므로 국민들은 공약 준수보다는 현실성을 감안한 경제운용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됨

○ 일반국민

- (전체 결과) 응답자 576명 가운데 선거공약인 '7% 이상'에 대해서는 11.8%만이 응답
- '5% 수준'에 가장 많은 가장 많은 36.5%가 응답

< '연 7%' 성장목표 수용도 >

(단위 %)



- 신정부가 내건 금년도 정책 운용 목표인 '6% 수준'에 대해서는 19.8%가 응답

- 집단 분석 결과

(지역)

- 거의 모든 지역(강원지역 제외)에서 '5% 수준'에 30% 이상의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음
- '7% 이상'에 대해서는 충청이 23.1%로 가장 높은 반면에 대구/경북은 4.8%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역은 10%를 약간 상회

(학력)

- 학력 구별없이 '5% 수준'에 가장 응답률(고졸 이하 35.5%, 대졸 37.8%, 대학원 이상 27.3%)이 높으며,
- 특이점으로 대학원 이상 학력자는 다른 학력자에 비해 '7% 이상'과 '4% 수준'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전문가

- (전체 결과) 선거 공약인 '7% 이상'에 응답자 108명 가운데 6.5%가 응답
 - '5% 수준'에 가장 많은 35.2%가 응답
 - 신정부가 내건 금년도 정책운용목표인 '6% 수준'에 대해서는 21.3%가 응답

문2) '대한민국 747'의 '국민소득 10년내 4만 달러' 공약에 대한 수용도

<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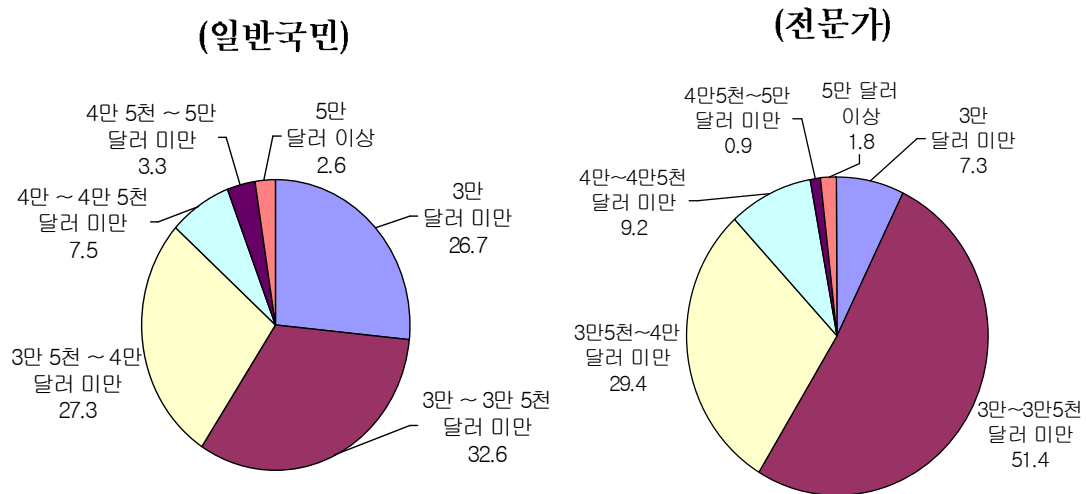
- 공약 목표인 4만 달러 이상에 대한 응답이 일반국민은 13.4%, 전문가 는 1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3만~3만 5천 달러 미만'에 일반국민(32.6%)과 전문가(51.4%) 모두 가장 많이 수용하였음
- 여기에 '3만 5천 ~ 4만 달러 미만'의 응답까지 포함하면 국민소득 3만 달러대에 일반국민은 60%, 전문가는 80% 정도에 해당하여 '4만 달러 에 못 미쳐도 성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

- (전체 결과) 응답자 576명 가운데 '3만~3만 5천 달러 미만'에 가장 많은 32.6%가 응답
 - 여기에 '3만 5천 달러 이상 ~ 4만 달러 미만'에 응답한 27.3%를 합하면 국민소득 3만 달러대에 전체 60%가 응답
 - 그리고 '3만 달러 미만'에 대해서도 26.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공약

< '국민소득 10년내 4만달러' 목표 수용도 >

(단위 %)



목표 '4만 달러' 달성에 못 미쳐도 성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집단 분석 결과)

- (지역) 3만 달러대 수준에는 서울(66.9%)과 대구/경북(62.9%)의 응답이 많았고, 4만 달러 이상은 충청(23.2%)이 응답이 많았음
- (성별) '3만달러 미만'에 대한 응답이 남성(30.8%)이 여성(22.5%)보다 많음
- (소득) 월 소득이 높을수록 '3만 달러 미만'에 대한 응답률이 낮아지는 특성을 보임

○ 전문가

- (전체 결과) 응답자 109명 가운데 '3만 ~ 3만 5천 달러 미만'에 절반 이상인 51.4%가 응답
 - 3만 달러대에 거의 대부분인 80.8%가 응답하였고
 - 이에 비해 공약 목표인 4만 달러 이상에는 11.9%만이 응답

문3) '대한민국 747'의 '10년내 세계 7대 강국' 공약에 대한 수용도

< 요약 >

- 공약 목표인 '7대 강국' 실현을 요구하는 응답이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동일한 1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10위~12위 정도'의 달성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응답률이 높은 '8위~9위 정도'까지 합하면 75% 수준
- 현재의 '13위 유지'에 대해서도 일반국민 14.9%, 전문가 11.0%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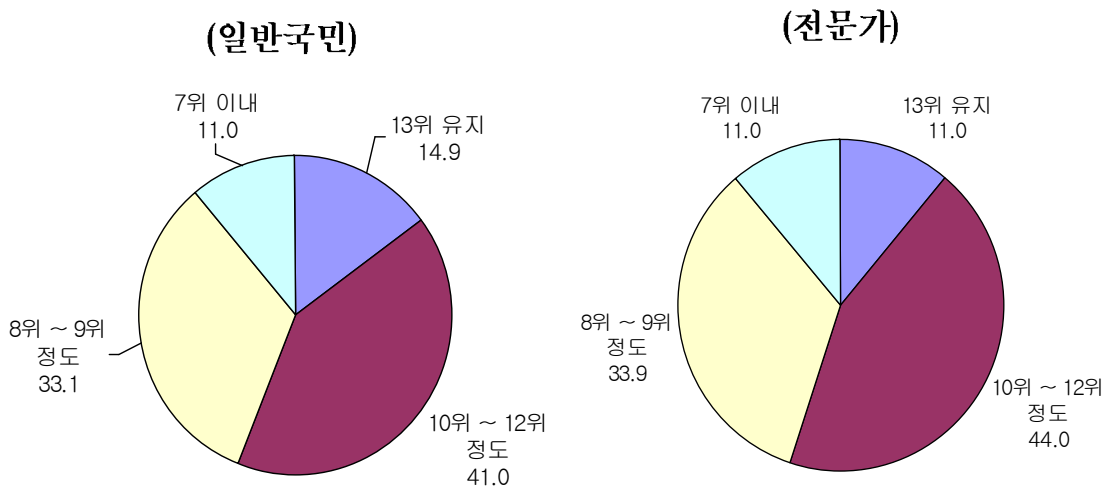
○ 일반국민

- (전체 결과) 응답자 571명 가운데 가장 많은 41.0%가 '10위~12위 정도'에 응답하였고, 선거공약인 '7위 이내'에 대해서는 11.0%에 불과
 - 다음으로 '8~9위 정도'에도 33.1%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국가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현재의 '13위 유지'에도 14.9%가 응답하고 있음

- (집단 분석 결과)

< '10년내 세계 7대 강국' 목표 수용도 >

(단위 %)



- (학력) 고졸이하와 대졸은 '10위 ~ 12위 정도'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나,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는 '8위 ~ 9위 정도'에 높은 응답
- (소득) 101~300만원대의 소득층이 '13위 유지'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 전문가

- (전체 결과) 응답자 109명 가운데 가장 많은 44.0%가 '10위~12위 정도'에 응답하였고, 선거공약인 '7위 이내'에 대해서는 11.0% 응답
 - '8~9위 정도'에도 33.9%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음
 - 선거공약인 '7위 이내'가 아니어도 전반적으로 국가 위상이 향상되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음

문 4) '일자리 창출 연 60만 개' 공약에 대한 수용도

<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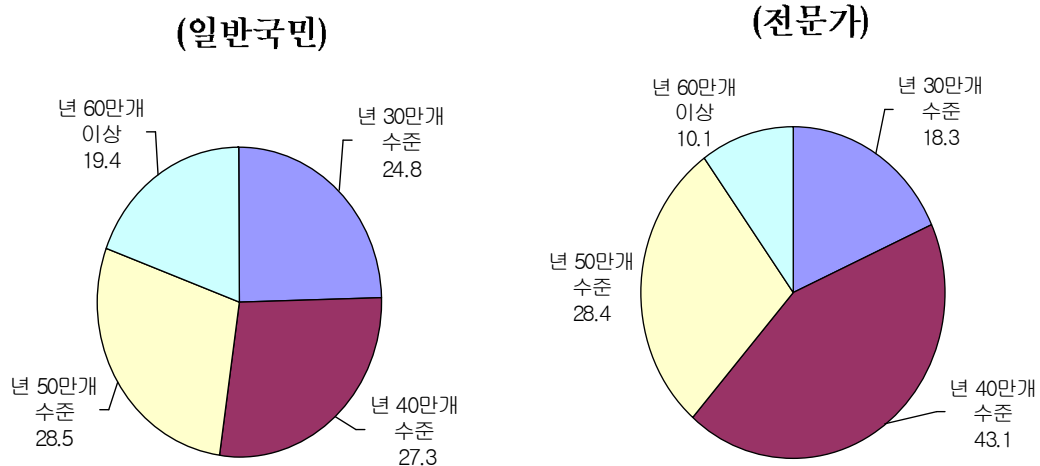
- 공약 목표인 '연 60만 개' 창출에 대해 일반국민은 19.4%, 전문가는 10.1%가 응답
- 일반국민은 '연 50만 개 수준'에 가장 많은 28.5%가 응답하였고, 전문가는 '연 40만 개 수준'에 가장 많은 43.1%가 응답
- 금년도 정책 목표인 35만 개보다 많은 40만 개 이상에 대해 일반국민은 75.2%, 전문가는 81.5%가 응답하여,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이 노력해야 하며, 한편으로 對국민에 대한 정책 이해를 넓혀야 할 것임
- 다른 정책공약보다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국민들은 기대가 상당히 높았음

○ 일반국민

- (전체 결과) 응답자 572명 가운데 가장 많은 28.5%가 '연 50만 개 수준'에 응답하였고, 선거공약인 '연 60만 개 이상'에 대해서도 19.4%가 응답
- 이외 설문항목인 '연 40만 개 수준'에 27.3%, '연 30만 개 수준'에 24.8%의 응답률을 보여 전 항목에 걸쳐 고른 응답 분포를 보임

< '일자리 창출 연 60만 개' 목표에 대한 수용도 >

(단위 %)



- (집단 분석 결과)

- (지역) 지역별로 높은 응답을 보인 항목을 살펴보면, 서울은 50만 개 (38.9%), 전라·대구/경북은 40만 개(29.0%), 인천/경기는 30만 개와 40만 개(27.9% 동일), 부산/울산/경남은 30만 개(29.8%)이며, 그리고 충청은 다른 지역과 달리 60만 개(34.4%) 이상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 (연령) 20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연 30만 개 수준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어, 현재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타연령보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여겨짐

○ 전문가

- (전체 결과) 응답자 109명 가운데 가장 많은 43.1%가 '연 40만 개 수준'에 응답하였고, '연 60만 개 이상'에 대해서도 10.1%가 응답
 - '연 50만 개 수준'에도 28.4%가 응답하여 70% 이상이 연 40~50만 개 수준에 응답한 것으로 조사됨
 -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인 35만 개 수준 보다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고 있음

문 5)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에 대한 수용도

<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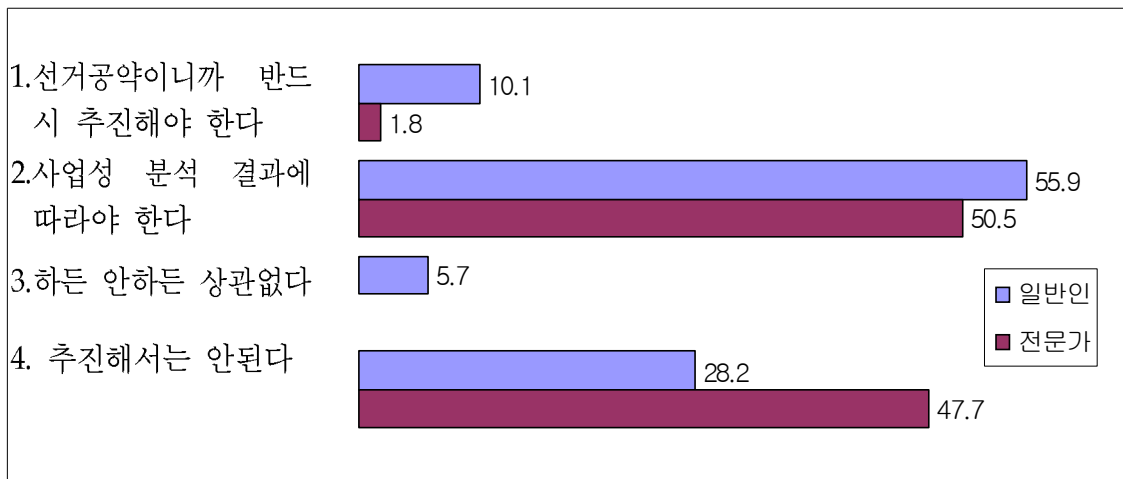
- '선거공약이니까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공약 준수에 대해 일반국민은 10.1%, 전문가는 1.8% 응답에 불과
-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대운하 건설을 사업성 분석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대운하 건설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일반국민은 28.2%였으나 전문가는 47.7%에 달하고 있음
-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부가 대운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국민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

○ 일반국민

- (전체 결과) 응답자 57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5.9%가 '사업성 분석 결과에 따라야 한다'에 응답
 - 공약준수를 가리키는 '선거공약이니까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항목에는 10.1%가 응답
 - 그리고 대운하 건설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에는 28.2%가 응답

< '한반도 대운하 건설' 정책에 대한 수용도 >

(단위 %)



- 집단 분석 결과

(지역별)

- ‘선거공약이니까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 충청(18.8%), 부산/울산/경남(12.6%), 대구/경북(12.9%)의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 대운하 건설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에는 강원(38.9%), 전라(37.3%), 인천/경기(33.8%)의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연령별)

- 젊은 연령층일수록 ‘사업성 분석 결과에 따라야 한다’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 40대가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에는 가장 많이 응답(35.5%)
- ‘선거공약이니까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60대가 21.3%로 가장 많이 응답

(학력별)

- 학력이 높을수록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에 응답률이 높음
- ‘사업성 분석 결과에 따라야 한다’에 대해 대졸이 가장 많은 응답(60.2%)

(소득별)

- 소득이 낮을수록 ‘선거공약이니까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 응답이 많음
- 반면에 소득이 높을수록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데에 대해 응답 많음

○ 전문가

- (전체 결과) 응답자 109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50.5%가 ‘2. 사업성 분석 결과에 따라야 한다’에 응답

- ‘선거공약이니까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항목에는 1.8%만이 응답
-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에는 47.7%가 응답

문 6) '한미FTA 추진' 공약에 대한 수용도

<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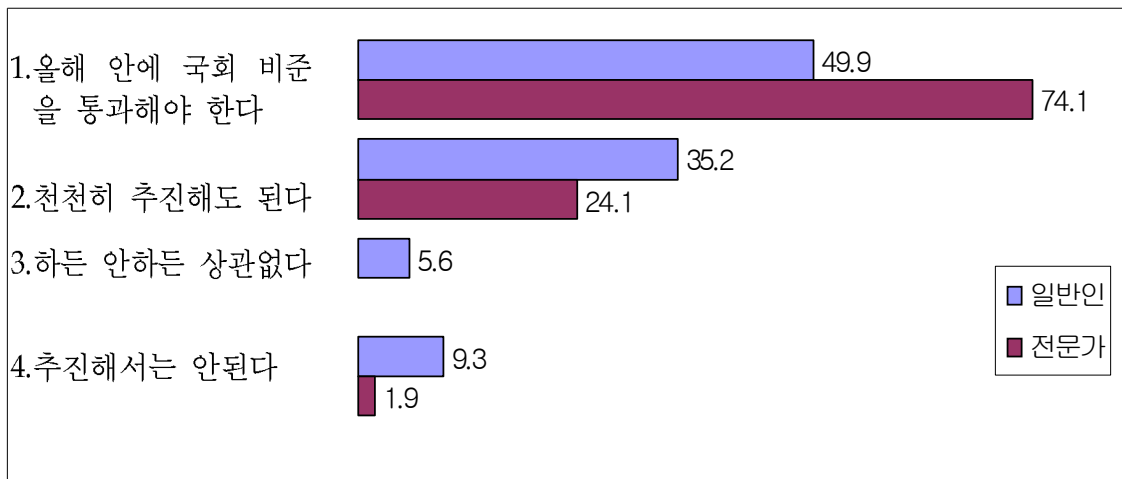
- 일반국민은 49.9%, 전문가는 74.1%가 한미FTA가 '올해 안에 국회비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데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 '추진해서는 안된다'에는 일반국민 9.3%, 전문가 1.9% 응답에 불과
- 한편 '천천히 추진해도 된다'에 일반국민 35.2%, 전문가 24.1%의 비교적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어, 정부는 국민에 대한 FTA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면서 한미FTA의 조속한 타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일반국민

- (전체 결과) 응답자 571명 가운데 절반인 49.9%가 '올해 안에 국회비준을 통과해야 한다'에 응답
 - '천천히 추진해도 된다'도 35.2%로 비교적 높게 응답하였으며,
 - 한미FTA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에는 9.3%만이 응답

< '한미FTA 추진'에 대한 수용도 >

(단위 %)



- 집단 분석 결과

(연령별)

- 젊은 연령층(20대, 30대)일수록 '추진해서는 안된다'에 응답이 많으며,
- 반면에 연령이 높을수록 '올해 안에 국회비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데에 응답이 많음

(성별)

- '올해 안에 국회비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데에 남성은 60.9%가 응답하였으나, 여성은 38.2% 응답
- '천천히 추진해도 된다'에 남성은 29.1%, 여성은 41.5%에 달해,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FTA 추진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

(직업별)

-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데에 자영업(7.9%), 전업주부(5.6%)보다 회사원(12.3%), 공무원(10.3%)의 응답이 많음

○ 전문가

- (전체 결과) 응답자 108명 가운데 3/4인 74.1%가 '올해 안에 국회비준을 통과해야 한다'에 응답
 - '천천히 추진해도 된다'에 대한 응답은 24.1%였으며,
 - '추진해서는 안된다'에는 불과 1.9%가 응답

문 7) '작은 정부' 공약에 대한 수용도

<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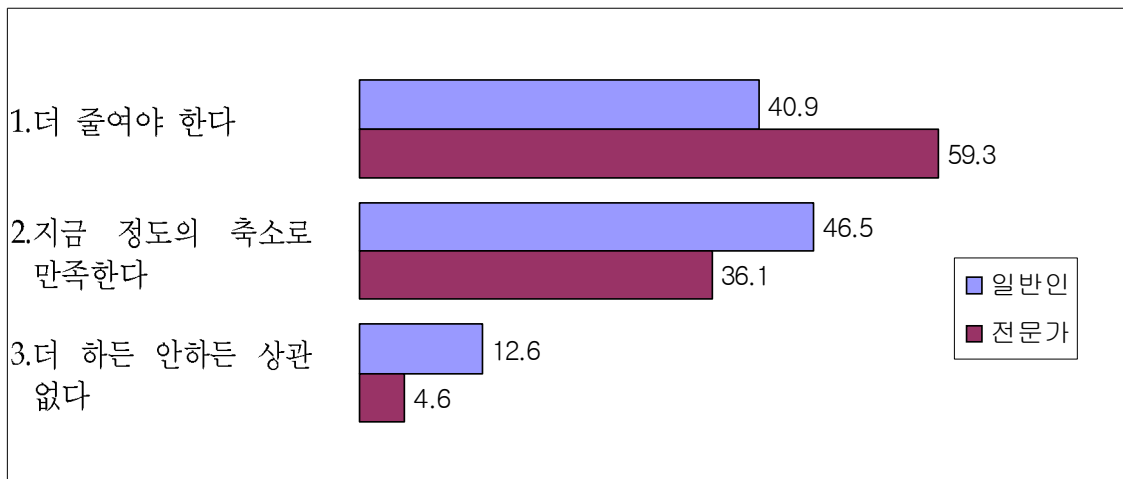
- 신정부 출범과 맞물려 단행된 정부 축소 개편에 대해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
- 일반국민은 '지금 정도의 축소로 만족한다'에 46.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더 줄여야 한다'에도 40.9%의 높은 응답을 보였음
- 전문가는 '더 줄여야 한다'는 데 59.3%라는 높은 응답을 보였음
- 국민들은 지금 정도의 축소에 만족하면서도 한편으로 아직 더 축소해야 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 일반국민

- (전체 결과) 신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정부부처 축소 개편에 대해 응답자 557명 가운데 46.5%가 '지금 정도의 축소로 만족한다'에 가장 많이 응답
 - '더 줄여야 한다'에도 응답률이 40.9%여서 '지금 정도의 축소로 만족한다'와 거의 비슷한 응답률을 보임
 - '더 하든 안하든 상관없다'에는 12.6% 응답

< '작은 정부' 실천에 대한 수용도 >

(단위 %)



- 집단 분석 결과

(지역별)

- 충청 지역은 61.3%가 '지금 정도의 축소에 만족한다'에 응답
- 전라와 인천/경기 두 지역은 '지금 정도의 축소에 만족한다'보다 '더 줄여야 한다'에 응답이 많음

(연령별)

- 젊은 연령층인 20대, 30대가 '지금 정도의 축소에 만족한다'에 많은 응답을 보인 반면,
- 나머지 40대 이상은 '더 줄여야 한다'는 데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직업별)

- 공무원이 다른 직업보다 '더 줄여야 한다'에 18.4%로 가장 적은 응답률을, 반면에 '지금 정도의 축소로 만족한다'에 63.2%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음

○ 전문가

- (전체 결과) 응답자 108명 가운데 59.3%가 '더 줄여야 한다'에 가장 많이 응답
 - '지금 정도의 축소로 만족한다'는 36.1%가 응답
 - 나머지 '더 하든 안하든 상관없다'에는 4.6%가 응답

문 8) '선거 공약 준수'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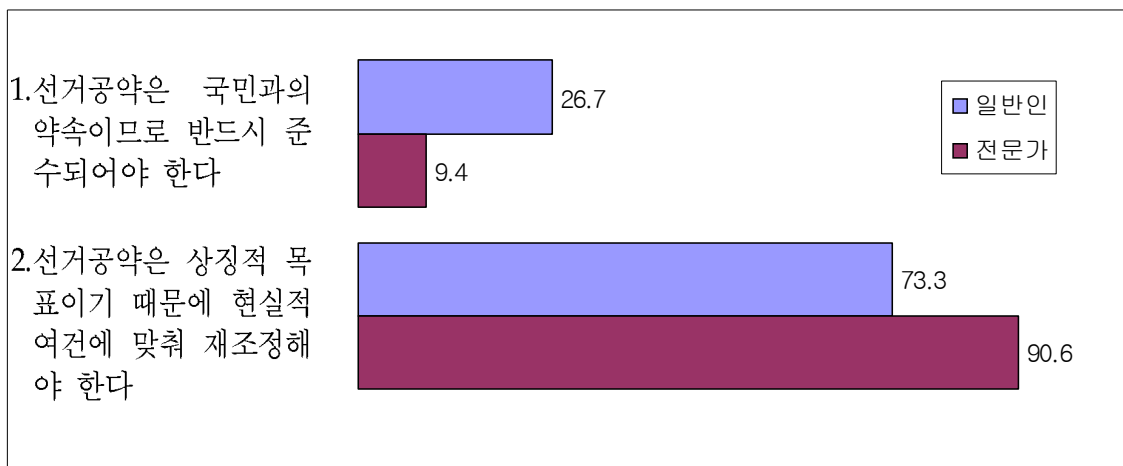
< 요약 >

- 선거공약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선거 공약은 현실적 여건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는 데 일반국민은 73.3%, 전문가는 90.6%라는 절대 다수의 의견을 보임
- 정부는 공약에 제시한 목표에 얽매어서는 안되며, 현 상황에 따라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일반국민) '선거 공약은 상징적 목표이기 때문에 현실적 여건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는 항목에 73.3%가 응답
 - 반면에 '선거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나머지 26.7%가 응답
 - 집단별로 살펴보면, '선거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항목에 가장 많이 응답한 집단은 강원(38.9%), 60대 이상(38.7%), 고졸이하(32.7%), 자영업(29.9%), 월소득 100만원 이하(44.9%)로 나타남
- (전문가) 응답자 106명 가운데 90.6%라는 절대 다수가 '선거공약은 상징적 목표이기 때문에 현실적 여건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에 응답

< '작은 정부' 실천에 대한 수용도 >

(단위 %)



3. 종합 평가

-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선거 공약에서 제시한 목표치를 엄격하게 요구하거나 기대하고 있지 않음
 - 신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인 ‘대한민국 747’에 담겨져 있는 ‘7% 성장’,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을 준수해야 하는 의견이 순서대로 일반인은 11.8%, 13.4%, 11.0%, 전문가는 6.5%, 11.9%, 11.0%에 불과
 - 일자리 창출 ‘연 60만개’에 대한 의견은 일반인이 19.4%에 이르러 다른 정책 목표보다 기대가 상당히 높음

- 정부는 선거공약에 제시한 목표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현 상황에 맞춰 정책 목표를 재설정, 운용하는 게 바람직함
 - 정책 목표 수치를 달성하는 데 얽매어 정책을 운용하게 되면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높아짐
 - 또한 ‘숫자 놀음(numbers game)’이라는 함정에 빠져, 실효성이 높은 정책 추진을 통한 달성보다는 단순히 수치 관리에 집착할 위험이 높아짐
 - 만약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됨
 - 본 조사 결과로 보면, 국민들은 공약 설정치보다는 낮은 수준을 수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현실성있는 정책 목표를 재설정, 운용하는 게 바람직함

- 다만, 정부는 목표 변경 및 추진 정책에 대하여 국민과의 충분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외 정치, 사회, 경제의 현실 여건, 국제적인 위상,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기대치를 감안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 대다수가 국가 비전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정부의 정책 실천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

수석연구위원 이장균(02-3669-4119, johnlee@hri.co.kr)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2	2003	2004	2005	2006(P)	2007(E)	2008(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7.0	3.1	4.7	4.2	5.0	4.5	5.1
	최종소비지출 (%)	7.6	-0.3	0.4	3.9	4.5	4.4	4.6
	민간소비 (%)	7.9	-1.2	-0.3	3.6	4.2	4.3	4.5
	총고정자본형성 (%)	6.6	4.0	2.1	2.4	3.2	4.6	5.8
	건설투자 (%)	5.3	7.9	1.1	-0.2	-0.4	2.5	3.8
	설비투자 (%)	7.5	-1.2	3.8	5.7	7.6	7.5	8.5
대 외 통 관 래 기 준	경상수지 (억 \$)	54	119	282	166	61	-30	-50
	무역수지 (억 \$)	103	150	294	232	161	110	60
	수출 (억 \$)	1,625	1,938	2,538	2,844	3,250	3,700	4,110
	증가율 (%)	(8.0)	(19.3)	(31.0)	(12.0)	(14.4)	(13.8)	(11.1)
	수입 (억 \$)	1,521	1,788	2,245	2,612	3,094	3,590	4,050
	증가율 (%)	(7.8)	(17.6)	(25.5)	(16.4)	(18.4)	(16.1)	(12.8)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2.7	3.6	3.6	2.8	2.2	2.5	2.8
	실업률 (%)	3.1	3.4	3.7	3.7	3.5	3.5	3.0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253	1,192	1,145	1,024	955	925	915
	국고채금리 (평균%)	5.8	4.6	4.1	4.3	4.8	5.0	5.3